李대통령 국정쇄신책은?

개헌·행정구역 개편 카드 꺼낼지 관심

선거구제와 맞물려 '근원적 처방' 유력

개각 등 인적쇄신은 당장 안할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책이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여파로 형성된 국정쇄신 민심에 방미 직전 '근원적 처방'을 언급했던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가진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제시할 국정쇄신책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정치판의 지형 변화 등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호남 민심은 이 대통령의 국정 쇄신책이 과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론=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에 개헌론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다음 달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이슈와 관련,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아직 회의적이다. 사안의 폭발성과 현실성을 감안할 때 극심한 정쟁 및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지역 갈등과 정쟁을 유도하는 정치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국정쇄신책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도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제와 맞물려 있으며 국회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부담이 적다.

실제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중·대선거구제는 역대 정권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검토됐으나 정치권의 기득권 때문에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이 대통령 사과=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원 조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이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다음달 초반, 국정쇄신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및 정국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각 등 인적쇄신=당장 개각을 포함한 인적쇄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여야 대표와의 회담에서 "장관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각이 국면 전환용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는 인적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밀려서 개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20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인사를 단행했다. 단계적으로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호남 인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은 국정쇄신과 맞물려 어떠한 탕평 인사책이 제시될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에 맞서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준비하는 등 충돌이 예상된 가운데 정문 앞의 바리케이트가 긴장감을 준다. /연합뉴스

"무조건 등원하라" "5대 조건 지켜라"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대치도 걸림돌로

■ 6월 국회 정상화 불투명… 여야 핵심 쟁점은

6월 국회가 20일 넘게 장기 표류하고 있으나 '개회 조건'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 때문에 정상화가 아직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조건 등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5대 선결조건'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법 6월 표결처리에 대한 여야 대치는 국회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단독국회 소집하나=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 시한을 사실상 22일까지로 정해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22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단독 개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단독 개회'가 결정되면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그동안 표류해온 국회는 이르면 24일부터 열리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카드를 현실화하는 데 따를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결사항전'할 태세다. 민주당 일각에서 '몸으로 막겠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 '5대 선결조건' 타협되나=이명박 대통령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특검, 검찰개혁 등 민주당의 '조건'에 대한 여야 입장은 평행선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한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의 진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외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문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 내에서는 5개 요구조건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날선 대치=6월 임시국회가 개회될 경우 최대 쟁점은 단연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미디어법 문제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5대 선결조건'을 '6대 선결조건'로 늘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간 입장차는 확연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의 시행시기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반해 민주당은 현 비정규직법상 '사용기간 2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쇄신논란 재점화

'민본 21' 쇄신안 공개 … 靑-지도부 압박

쇄신 방법 및 수위를 둘러싼 내부 혼선과 이명박 대통령 방미 등 각종 정치일정으로 동력을 상실했던 여권의 쇄신논의가 금주부터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여전히 인위적 인적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쇄신파들이 다시 국정 및 인적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 당내 갈등은 물론 당청 갈등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모임인 '민본21'은 2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을 공개, 쇄신논의에 다시 불을 댕겼다.

이반된 민심과 국정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당정청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하며, 당의 근원적 화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본21은 조만간 박희태 대표를 면담하고 쇄신안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쇄신특위도 주초 쇄신안을 확정,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쇄신특위 쇄신안은 국민통합과 민생중심으로의 국정 운영기조 전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쇄신 및 청와대 개편, 국민통합형 내각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7인성명'에 가담한 친이계(친이명박) 직계들도 비슷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파들은 특히 쇄신안에 대한 청와대 및 지도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상황에 따라 잠시 접었던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권의 쇄신 내홍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강경 쇄신파들은 조기 전당대회 문제를 포함한 쇄신안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 시한을 6월 말로 못박고 있어 이달 말 또는 7월 초가 향후 여권 쇄신 논란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쇄신을 하면 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않는대로 정국에 미칠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남북관계-개성공단 분리 접근해야"

무소속 정동영 의원(전주 덕진·사진)은 21일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을 분리해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장관 시절 개성공단의 산파역을 맡았던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마지막 문인 개성의 문이 닫히면 한반도는 다시 어두운 냉전의 시대로 복귀할 것"이라면서 "개성을 정치군사적 대립의 인질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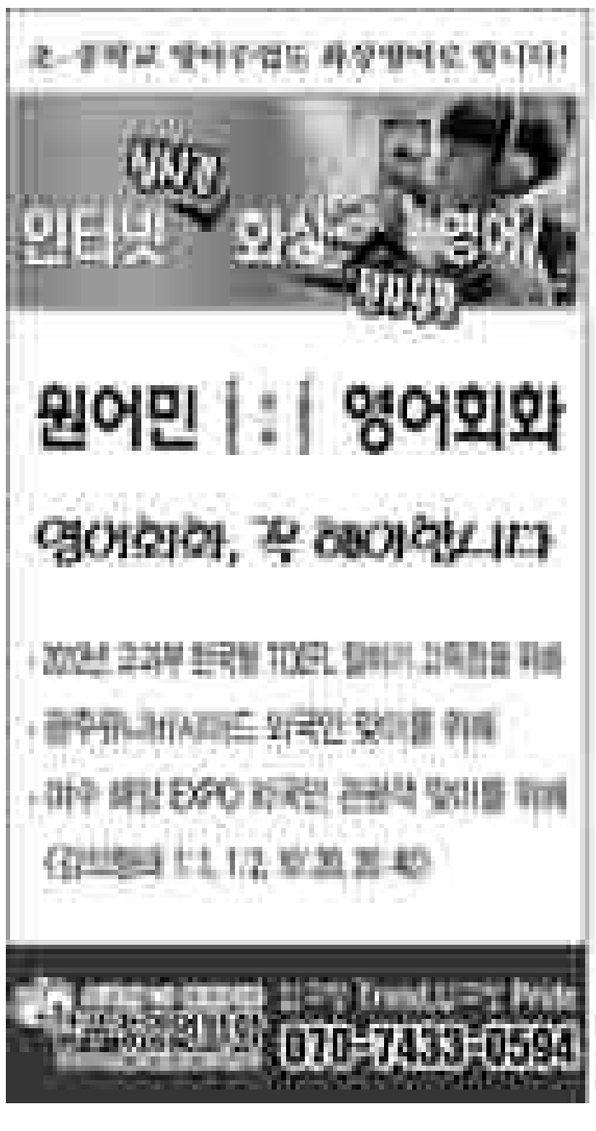
정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 접촉이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지금처럼 서로가 폐쇄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귀머거리 대화' 방식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토지임대료 등 기술적인 쟁점들은 진정성이 있으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시 남북이 입을 손실과 관련, "북한은 4만명의 일자리를 잃겠지만 남쪽의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다"며 "연간 매출액 30억 달러, 누적 매출액 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내의 협력업체·부품생산 업체까지 포함하면 2천600여개 업체가 관련돼 있고 7만5천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모두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신윤식 의원

전남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19명의 예결위 위원을 선출했으며, 이 가운데 신윤식 의원(민주당·고흥 2·사진)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들 예결위원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예결위는 다음달 1일부터 2008년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